

# 트럼프 ‘해방의 날’ 선언 1주년, 평가와 의미

김지선 수석연구원, 경영연구센터(jisunkim@posri.re.kr)

## 목차

1. “국민 여러분,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입니다”
2. 상호관세는 제동, 관세 정책은 유지·강화
3. 트럼프가 말한 ‘해방’, 어디까지 왔는가
4. 트럼프 ‘해방’의 함의
5. 한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 Executive Summary

-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미국 해방의 날'을 선포. 1년이 지난 현재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등 IEEPA 관세는 무효화되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재구성되며 지속 강화 중
  - IEEPA 관세를 대체해 무역법 122조 기반의 전 세계 대상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제조업 과잉생산 등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
  - 또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추가 품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
-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을 무역수지 적자, 對中 공급망 의존, 탈산업화 흐름, 정책 수단 제약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단기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미국이 그동안 고수해 온 세계관과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거 수입억제에 초점을 둔 관세 정책의 스펙트럼을 외교, 경제, 공급망,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 수행의 핵심 도구로 확장
  -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과 협상력 회복, 전략산업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 확보 및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부흥을 도모
- 이는 국제 규범, 자유무역 및 효율성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국익, 경제안보, 전략적 자립이 우선시 되는 질서로 바꾸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과거와는 다른 정책·안보·공급망이 결합된 '전략 경쟁' 차원으로 전환시키며 새로운 판(版)을 형성
- 이러한 변화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과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확대 흐름은 제조 경쟁력이 높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이에 우리 산업과 기업은 단일화된 접근에서 벗어나 시장별 정책·규제·공급망 등을 감안한 보다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전략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도약할 필요
  - 특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국 정책의 직접 영향권에 위치한 산업은 단순 수출 확대를 넘어 고부가 제품 생산, 현지화, 기술 협력 등이 결합된 전략으로의 전환 필수
- 아울러 정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 간 관계 역시 단순 협력 혹은 규제 대응을 넘어 국가 전략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설계, 구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재정립할 필요

지난 4.2 일(미국 현지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포한 지 1 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1 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 경과를 살펴보고 트럼프가 이야기 한 '해방'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 1. “국민 여러분,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입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 '25.4.2일(미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sup>1</sup>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대한 10% 기본관세 및 주요 무역적자국 대상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착취당해 왔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4.2 일을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이자 '경제적 독립 선언일(declaration of economic independence)'로 규정하고 '해방의 날'을 천명 <sup>2</sup>

## 2. 상호관세는 제동, 관세 정책은 유지·강화

- [IEEPA 관세] 상호관세는 유예 및 협상을 거쳐 '25.8.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로 종료('26.2.20일)<sup>3</sup>
  - 대법원(Supreme Court)은 IEEPA가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 특히 IEEPA의 입법 취지와 과거 적용 사례를 고려할 때, 동 법률은 금융제재, 자산동결 등 대외경제 거래 통제 수단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상시적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sup>1</sup>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77년 제정된 법률로 미국 안보, 외교, 경제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대외경제 거래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sup>2</sup> 트럼프 대통령 연설문 원문 링크([https://transcripts.cnn.com/show/arena/date/2025-04-02/segment/01?utm\\_source=chatgpt.com](https://transcripts.cnn.com/show/arena/date/2025-04-02/segment/01?utm_source=chatgpt.com))

<sup>3</sup>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IEEPA 관세의 위법 판결에 동의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

-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펜타닐/불법이민 관세 및 기본/상호관세는 무효화
  - [펜타닐/불법이민 관세] 캐나다 35%, 멕시코 25%, 중국 10%
  - [기본/상호관세] 모든 수입품 대상 10%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69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의 경우 별도로 설정된 상호관세율 부과(한국 15%)

※철강, 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 ○ [대체 관세] 무역법 122조<sup>4</sup>에 따른 10% 관세 부과(2.24일) 및 301조<sup>5</sup> 조사 착수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전 세계 수입품 대상 10% 관세 부과를 명시한 행정조치에 서명(2.20일)
  - 해당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24일 0시 1분부터 부과되었으며 일부 핵심광물, 금속, 에너지 제품 등은 제외
  - 기존 일반 관세와는 별도로 추가 부과되며 철강 등에 부과 중인 232조 품목별 관세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사 방향을 발표하고 제조업 과잉능력 및 강제 노동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sup>6</sup>
  - [USTR 발표 내용(2.10일)]: ① 대상: 주요 교역국(most major trading partner), ② 시한: 최대 신속 진행, ③ 검토사항: 제조업 과잉능력, 강제노동, 의약품 가격, 美 기술기업/제품 차별, 디지털서비스세, 해양오염, 수산물/쌀 등 정책 관행
  - [조사개시] (3.11일) 제조업 과잉능력: 한국 포함 16개국<sup>7</sup>, (3.12일) 강제 노동: 한국 포함 60개국 대상

<sup>4</sup> 무역법 122조: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달러가치 급락 등 발생 시 최장 150일 간 최대 15%의 관세 부과 가능 (의회 동의 시 연장 가능)

<sup>5</sup> 무역법 301조: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피해 발생 시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 가능

<sup>6</sup>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언론 브리핑에서 122조 관세의 150일 시한 (7.24일) 만료 전까지 301조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 (Reuters 등 언론 종합)

<sup>7</sup> USTR은 팩트시트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문제가 두드러지는 주요 산업으로 철강,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을 지목하였으며 별도로 발표된 연방관보 공지를 통해 한국의 구조적인 공급 및 생산 과잉의 근거로 철강,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제시

- [232조 관세] IEEPA 판결과 무관하게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sup>8</sup>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추가 품목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
  - [시행 중]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50%<sup>9</sup>, 자동차 및 부품 25%(韓/日/EU 15%), 반도체 25%, 목재 최대 25% 등
    - 배터리 및 소재 포함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대상 232조 국가별 협상 개시('26.1.14일)

### 트럼프의 해방의 날 선언 이후 1년 간의 경과

#### '25.4.2일 트럼프, 미국의 '해방의 날' 선언하며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 부과 발표

- 기본관세 10%(4.5일부) ▶ 57개 무역적자국 대상 국가별 상호관세: 韓 25%, 中 34%, 日 24%, EU 20% 등(4.9일부)
- ※ 예외: IEEPA 펜타닐/불법미인 관세 대상국(캐나다, 멕시코), 232조 부과 품목, 금과/에너지/광물 등

#### 4.9일 양자 협상 위해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7.9일限) \*기본관세 10%는 부과

↳ (5.24일)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근거 관세 조치 위법 판결(1심)

#### 4월~ 국가별 협상 및 무역 합의(韓, 日, EU, 英 등)

- 韓美 무역합의(7.31일): 韓→美 - US\$3,500억 대미 투자(US\$1,500억 조선협력패키지 포함)
- 美→韓 - 상호관세 25→15%, 자동차 232조 25%→15%

#### 7.7일 유예 시한 8.1일로 연장

#### 7.31일 69개국 대상 조정 세율 발표 (韓/日/EU 15%, 대만/베트남 20%, 中 10% 등, 기타 국가 10%)

#### 8.7일 상호관세 부과 개시

↳ (8.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IEEPA 근거 관세 조치 위법 판결(항소심)

#### '26.2.20일 대법원 IEEPA 관세 최종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부과 종료

#### 2.24일 무역법 122조\* 10% 대체관세 부과(전세계 수입품 대상, 최장 150일) \*국제수지 적자 관련

#### 3월~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불공정 무역 행위 관련

- (3.11일) 제조업 과잉능력: 韓 포함 16개국 대상, (3.12일) 강제 노동 관련: 韓 포함 60개국 대상

<sup>8</sup>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품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 판단 시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 가능

<sup>9</sup> 지난 4.2일(미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개편하는 행정조치에 서명. 이번 조치로 파생제품 232조 관세 부과 기준이 기존 함량(contents) 기준에서 전체 제품 가치(full customs value) 기준으로 전환되고, 다수 대상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4.6일부로 기존 50%에서 25%로 조정 (철강 등 1차 제품의 경우 5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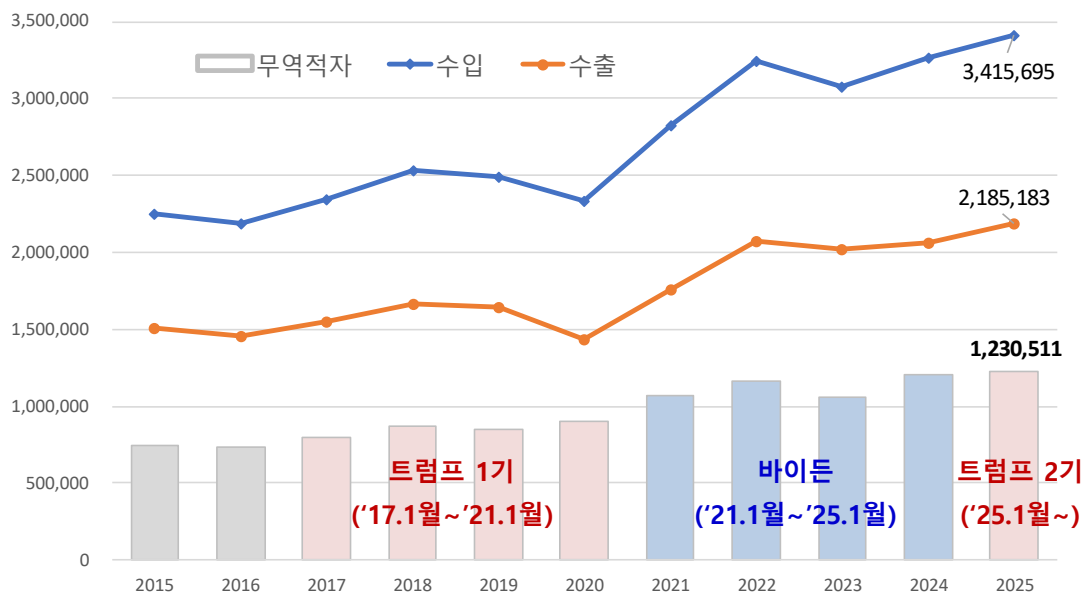
### 3. 트럼프가 말한 '해방', 어디까지 왔는가

- 트럼프의 '해방'을 상호관세라는 정책 수단의 지난 1년간의 성과 차원에서 평가해 보면 크게 ▶무역수지 적자 ▶글로벌/對中 공급망 의존도 ▶탈산업화 기초 ▶정책 수단 제약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1) 무역수지 적자로부터의 해방

- [단기] '25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약 U\$1.2조로 전년 대비 2.1% 증가
- [중장기] 트럼프 1기 무역적자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기간 중 무역적자가 U\$1조를 넘으며 지속 증가

【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 수출입 추이 (U\$백만, '15~'25년) 】



\*자료: US Census Bureau 데이터 기반 POSRI 정리

☞ 고강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적 (교역 구조의 특성 상 정책 효과의 시차 존재),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개선보다 조달선 변화가 우선 나타나는 단계. 향후 미국 내 투자 확대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교역 구조 및 무역수지 변화 전망

## (2) 중국 의존 공급망으로부터의 해방

- [단기] '25년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는 U\$2,021억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
- [중장기]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축소
  - 전체 무역적자 중 중국 비중: 49%('15년) → 33%('21년) → 16%('25년)
- 최근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수입이 급증 → 중국산 제품의 우회 유입 확대
  - '25년 미국의 수입증가율(전년 대비): 베트남 42%, 태국 44%, 말련 14%, 인니 24%

【 미국의 15대 무역수지 적자국별 수출 및 수입 (U\$백만, '25년) 】

|        |       | 무역적자      |        | 수출        |        | 수입        |        |
|--------|-------|-----------|--------|-----------|--------|-----------|--------|
|        |       | U\$백만     | 전년 대비  | U\$백만     | 전년 대비  | U\$백만     | 전년 대비  |
| 전세계    |       | 1,230,511 | 2.1%   | 2,185,183 | 6.0%   | 3,415,695 | 4.6%   |
| 1      | 중국    | 202,071   | △31.6% | 106,308   | △25.8% | 308,380   | △29.7% |
| 2      | 멕시코   | 196,913   | 14.8%  | 337,960   | 1.2%   | 534,874   | 5.8%   |
| 3      | 베트남   | 178,183   | 44.3%  | 15,657    | 20.0%  | 193,840   | 42.0%  |
| 4      | 대만    | 146,756   | 99.1%  | 54,666    | 28.5%  | 201,423   | 73.3%  |
| 5      | 아일랜드  | 114,201   | 32.0%  | 19,336    | 15.4%  | 133,537   | 29.3%  |
| 6      | 독일    | 73,047    | △13.7% | 83,062    | 9.7%   | 156,108   | △2.7%  |
| 7      | 태국    | 71,856    | 58.0%  | 19,484    | 9.1%   | 91,340    | 44.2%  |
| 8      | 일본    | 68,468    | △7.9%  | 82,067    | 3.9%   | 145,950   | △1.6%  |
| 9      | 인도    | 58,216    | 27.1%  | 45,608    | 9.8%   | 103,824   | 18.9%  |
| 10     | 한국    | 56,416    | △14.5% | 68,806    | 4.9%   | 125,222   | △4.8%  |
| 11     | 캐나다   | 46,442    | △25.1% | 336,518   | △3.8%  | 382,960   | △7.0%  |
| 12     | 스위스   | 34,304    | △10.4% | 71,694    | 186.3% | 105,998   | 67.4%  |
| 13     | 말레이시아 | 30,791    | 23.9%  | 28,867    | 4.5%   | 59,657    | 13.7%  |
| 14     | 이탈리아  | 30,754    | △30.1% | 43,668    | 35.0%  | 74,421    | △2.5%  |
| 15     | 인도네시아 | 23,716    | 32.5%  | 11,026    | 8.5%   | 34,742    | 23.8%  |
| *EU 27 |       | 218,750   | △7.3%  | 414,428   | 12.1%  | 633,179   | 4.5%   |

\*자료: US Census Bureau 데이터 기반 POSRI 정리

☞ 미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은 감소. 다만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분간 동남아 국가를 우회한 중국산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공급망에서의 재배치 예상 (중국 → 제3국 이동)

### (3) 탈산업화 기조로부터의 해방(제조업 부흥)

-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책의 초점을 미국 제조업 부흥을 통한 새로운 '황금시대'에 두고 관세 압박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
  - [對美 투자 합의] 한국: U\$3,500억(조선 협력 패키지 U\$1,500억 포함), 일본: U\$5,500억(U\$360억 규모 3개 투자 프로젝트 확정), EU: U\$6,000억, 대만: U\$2,500억 등
-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의 투자 유입은 견조. OECD에 따르면 '25.1~3분기 신규 對美 FDI는 약 U\$2,236억(세계 1위)<sup>10</sup>
  - 전 세계 신규 FDI 유입 중 미국 비중: 11%('20년) → 19%('25.1~3Q)
  - '25.1~3분기 기준 對美 FDI 제조업 비중: 44%

☞ 제조업 분야 등 대규모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유치는 진행 중. 강도 높은 제조업 육성 정책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고도화가 예상되나, 높은 임금과 숙련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 상존. 향후 주요국 투자 약속 이행 속도와 미국의 산업정책 전개 방향에 따라 제조업 생산 역량 확대 및 역내 공급망 확충 수준이 결정될 전망

### (4) 정책 수단 제약으로부터의 해방

- 과거 미국은 수입규제에 따른 경제 및 (수요)산업에 대한 파급영향을 고려, 전방위적 관세 정책보다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덤핑(AD), 상계관세(CVD) 등의 수단을 주로 활용
- 트럼프 1기 당시, 1962년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적용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특정 산업 보호 성격이 두드러짐
-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며 232조 대상 산업을 철강 외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IEEPA,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통령 권한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며 '다층적 관세 체계'를 구축

☞ 트럼프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정책을 넘어 산업정책, 재정정책(세수 확보), 외교 및 협상 수단으로 확장하면서 전략적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 트럼프發 관세 전쟁에 주요국도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비롯한 통상 정책의 역할 확대가 예상

<sup>10</sup> OECD, FDI in Figures ('26.1월)

## 4. 트럼프 '해방'의 함의

-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미국의 '해방'에 비유한 것은 단순한 관세 정책의 선언을 넘어 미국이 그동안 고수해 온 세계관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수입억제에 초점을 둔 관세 정책의 스펙트럼을 외교, 경제, 공급망,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확장
-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무역 중심 세계 질서로부터 벗어나 미국의 국익과 협상력 회복을, ▶중국 및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 확보를,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기반 복원과 제조업 부흥을 도모
  - 지난 4.13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2026 대통령 경제보고서(2026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수입억제 및 세수 확대를 넘어 국제 사회 및 양자 관계에서의 협상력 강화,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자본 유치와 국내 산업 보호 및 생산 확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
-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는 국제 질서 및 세계 경제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시사하며 기존의 국제 규범, 자유무역 및 효율성 중심의 질서에서 국익, 경제안보, 전략적 자립이 우선되는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
  - 최근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주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EU, 캐나다, 인도, 일본 등 주요국 역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하며 미국 정책과의 동조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결국 트럼프가 의미한 '해방'은 '완성된 결과'가 아닌 '방향 전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변화된 현재를 설명하는 동시에 향후 글로벌 질서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 5. 한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촉발된 현재의 글로벌 경제 및 통상 질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과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

- 한국은 '25년 기준 세계 제8위 수출국<sup>11</sup> ('24년 세계 6위)
  - '25년 한국의 전체 수출은 U\$7,093억, 수입 U\$6,319억으로 U\$774억의 무역 흑자를 기록.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U\$495억 흑자 기록
- '24년 기준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6%로 타 국가 대비 높은 수준<sup>12</sup>
  - 일본 16%, 중국 19%, 인도 11%, 미국 7%, 멕시코 33%, 독일 36%
- 이러한 변화는 기업 경쟁의 룰과 판(版)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하나 동시에 기회도 병존. 결국 성패는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량에 의해 좌우
  -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 내 무역규제 강화로 단기적인 수출 제약은 불가피하나 핵심/전략 산업에서의 공급망 재편은 제조 강국인 한국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
- 글로벌 경쟁 환경이 원가, 가격, 품질 등 전통적 요인을 넘어 정책, 안보, 공급망이 결합된 '전략적 경쟁' 차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기업은 단일화된 전략이 아닌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과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
  - 핵심 시장의 수요, 경쟁 여건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공급망 정책, 원료 및 소재 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략 수립 필요(예, 수출형/현지형/하이브리드형)
  -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국 정책의 직접 영향권에 위치한 산업은 단순히 수출 확대를 넘어 고부가 제품 생산, 현지화, 기술 협력 등이 결합된 전략으로의 전환 필수
- 아울러 정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 간 관계 역시 단순 협력 혹은 규제 대응을 넘어 국가 전략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설계, 구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재정립할 필요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sup>11</sup> 한국무역협회 K-Stat ('26.4.16일 기준)

<sup>12</sup> 명목 GDP 대비 수출 비중. 국가통계포털 (KOSIS, '26.4.16일 기준)

## [참고자료]

### [보고서/논문]

White House, '26.4.13., '2026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White House, '26.4.2., 'STRENGTHENING ACTIONS TAKEN TO ADJUST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White House, '26.4.2.,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trengthens Tariffs on Steel, Aluminum, and Copper Imports'

White House, '25.4.2.,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White House, '25.4.2.,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USTR, '26.3.12., USTR Initiates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USTR, '26.3.11.,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USTR, '26.3.11., Fact Sheet: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in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USTR, '26.2.20.,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Supreme Court IEEPA Decision'

White House, '26.2.20.,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White House, '26.2.20., 'President Trump on the Supreme Court's Tariff Decision'

US Supreme Court, '26.2.20.

### [웹사이트/데이터]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utm\\_source=kita.net&utm\\_medium=kita&utm\\_campaign=service\\_tatal&utm\\_content=banner\\_header](https://stat.kita.net/?utm_source=kita.net&utm_medium=kita&utm_campaign=service_tatal&utm_content=banner_header))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

OECD (<https://www.oecd.org/en.html>)

[언론기사]

Reuters, '26.3.13., 'US opens new unfair trade practices probes of 60 countries'